

해방 직후 대한민국 國軍의 창군과 그 역사성*

이 강 수**

1. 머리말
2. 해방 직후 국내외 민족세력의 창군활동
3.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과 국방경비대 창설
4. 미군정 군사단체 참여세력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
5. 맺음말

1. 머리말

해방직후 우리민족의 제일과제는 자주적인 민족국가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별로 신국가건설운동이 전개되었고, 군사분야에서도 ‘창군(創軍)’운동이 전개되었다. 해방전후 국내외 주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자주적인 신국가의 국군 창설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 본 논문은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주관(국방부, 국가보훈처 후원), 2013년 의병학술회의(『한말 항일 무장투쟁과 대한민국 국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전개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해방직전부터 중경임시정부를 필두로, 광복군과 조선의용군 등 해외무장투쟁세력이 신국가의 창군운동을 전개하였다.¹⁾ 국내에서도 조선국군준비대, 학병동맹, 광복군국내지대 등 다양한 군사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자주적인 신국가의 국군’ 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직후 대한민국 창군과 관련한 연구는 육군본부·한용원·노영기 등이 국방경비대 또는 대한민국 국군 건설 전반을 다루었고, 이강수·임종명 등이 해방직후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사설 군사단체를 다룬 연구성과가 있지만²⁾,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실적이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 창건의 역사적 연원을 염두에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이 분야 연구의 특성상 이데올로기적 영향도 있지만, 일제시기 항일 무장투쟁세력들이 해방 이후 한반도 정세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해방직후 국내 각 군사단체는 어떤 과정으로 창군운동을 전개했는지, 해방전후 각 군사단체에서 활동했던 주요 세력들의 행적과 사상, 지향 등의 구체적 연구가 빈약하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일차자료가 거의 전무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러한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국군의 역사적 연원과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국방경비대로 보고 있지만, 국방경비대는 광복군 등 국내 군사단체를 부정하고 일본군과 만주군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조동걸은 “대한민국 국군의 원류는 항일

-
- 1)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 2001) 참고.
 - 2)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김영만, 「미군정기 조선경비대 창설과정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5, 이강수, 「해방직후 국군준비대의 결성과 그 성격」, 『군사』 제32호, 1996; 임종명, 「조선국군준비대와 건군운동」, 『한국학보』 제2호, 고려사학회, 1997; 안진, 「조선국방경비대의 창설과 성격」,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 2005;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등

독립운동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고³⁾, 조항래 등은 한말 의병에 이어 만주의 독립군과 광복군의 맥락이 국군에 연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리고 한시준은 “대한민국이 창설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국군은 그 뿌리와 정신적 연원을 찾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국군의 뿌리와 역사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 이들 연구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원류에 대한 성찰과 그것이 갖는 민족사적 역사성 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대한민국 국군의 건설 과정과 그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방경비대와 해방직후 ‘사설’ 군사단체의 인적·물적 연관성 등을 주목할 예정이다. 또한 해방이후 남한정국은 통일운동과 단독정부 수립운동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뿐만 아니라 제헌국회에 참여하여 개혁하자는 ‘참여적 개혁세력’ 등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다는 점을 주목하여⁶⁾, 해방직후 군사단체들이 정치세력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노선을 설정하고 창군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이들의 창군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과 민족사적 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2. 해방 직후 국내외 민족세력의 창군활동

1) 해외 무장투쟁세력의 활동

일제말기 대표적인 해외 무장투쟁세력은 중경 임시정부의 광복군과 연안

3) 조동걸, 「한국군사의 原流意識」, 삼균학회, 『민족독립운동사와 국군의 맥락』, 1989.

4) 조항래, 「항일독립운동의 맥락에서 본 한국군의 정통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지식산업사, 1992.

5) 한시준,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문제」, 『군사』 제43호, 28쪽.

6) 이강수, 「참여적 개혁세력의 대두」, 『반민특위연구』, 나남, 2003, 89~102쪽.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 등이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임시정부 주석 김구 명의로 “임시정부는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9월 17일 광복군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한국광복군선언」을 발표하면서 발족되었다.⁷⁾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하면서 광복군 세력은 강화되었으며,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OSS와(전쟁성 전략첩보군) 합작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 되자 광복군은 신정부 국군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⁸⁾ 1945년 8월 28일 한국독립당은 제5차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적국내 한국사병은 국방군으로 개편한다.”고 선언하고⁹⁾, “국방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9월 3일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국내외에 통포에게 밝힌 임정 당면정책 13항에서, 일본군에 의해 학병, 징병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한적사병(韓籍士兵)’을 광복군으로 편입할 것을 천명했다.¹⁰⁾ 일본 점령지역에서 군사특파원을 파견하는 동시에 1945년 10월 중순부터 중국관 내에 있던 청년동포와 일본내 한적사병을 접수하여 ‘잠편지대(暫編支隊)’를 주요도시에 설치하였다. 잠편지대는 한구, 남경, 항주, 상해, 북평, 광둥와 국내 등 7개 지역에 설치되었다.¹¹⁾

또한 ‘확군활동(擴軍運動)’을 통해 중국 각지에 있는 한인청년들을 광복군으로 흡수 편입하여 광복군의 조직과 세력을 확대하고 국내에 들어가기 이를 기반으로 국군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광복군은 이러한 노력으로 해방 직전 800명이던 병력규모를 해방 후 2만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임시정부는 환국에 앞서 미군정에 4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¹²⁾

7) 韓國臨時政府宣傳委員會, 『韓國獨立運動文類』, 건국대출판부, 1976, 87쪽.

8) 한시준, 앞의 논문, 9쪽.

9) 「한국독립당제5차임시대표자선언」, 『백범김구전집』 6, 1999, 244~245쪽.

10) 추헌수, 『자료한국독립운동』 1, 연세대학교, 1979, 369쪽.

11) 조동길, 「중국 관내지방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지역적 특성』,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제7차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 1993, 64쪽.

12) 「임시정부 환국에 앞서 미군정에 4개조 요구」, 『신조선보』, 1945.11.21; 한시준, 앞의 논문, 10쪽.

1.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귀국 후 内地에 MP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
2. 조선의 치안유지는 우리들의 손으로 하겠다.
3.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군대를 귀국 후 구성하겠다.
4. 귀국 후의 정치행동에 대하여는 미군정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 가운데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군대를 귀국 후 구성하겠다”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정부는 국내에서 건군을 준비하였다.¹³⁾ 임시정부는 광복군과 국내외 잠편부대 등의 조직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국군을 건설하려 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해방직후 곧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1946년 6월경 귀국하였다. 그리고 다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이후 남한사회에서 전개된 창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다.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주력무장부대, 즉 당군(黨軍)이었다. 원래 명칭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였으나 1942년 7월 10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¹⁴⁾ 조선의용군은 중공군과 연합하여 화북, 화중 각지에서 중국 팔로군, 신사군 등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조선의용군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국내 진격을 계획하였지만 좌절되었다.¹⁵⁾ 이들은 해방직후 만주에서 신병을 모집하여 부대를 확대한 후에 국내에 귀환하려고 하였으나 소련군에 의해 거부되어 그 일부만이 무장해제 당한 채 개인자적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¹⁶⁾ 김두봉 등 조선독립동맹 주력 인사들은 해방직후 1946년 조선신민당 창당에 참여하고, 이후 조선신민당은

13) 한시준, 앞의 논문, 10~11쪽.

14) 역사적으로 보면 임시정부의 주력세력인 한국독립당과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의열단,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등 5개 단체가 1937년 7월 통합해 민족혁명당을 발족시켰다. 1940년에 발족한 한국독립당과 조선의용군·조선독립동맹은 모두 이 민족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염인호, 『김원봉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19쪽).

15) 조동걸, 「8·15 직전의 독립운동과 그 시련」, 송건호 외 역,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7, 264쪽.

16) 심지연, 『조선신민당연구』, 동녘, 1988, 49~50쪽.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는 한편 조선의용군의 장교와 병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지역으로 입국하여 이후 1948년 2월 8일 북한 인민군이 조직될 때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은 미·소에 의해 정부군 또는 당군으로의 입국이 거부되고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1948년 뒤늦게 북한으로 입국하여 북한 인민군 창건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광복군은 1946년에 국내로 들어와 대한민국 국군에 일부 참여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으로 자리하지는 못하였다.

2) 국내 자생적 군사단체의 조직과 활동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해외 무장투쟁세력이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단체들이 국군 건설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945년 11월 현재 30여 개의 군사단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활동하고 있었다.¹⁷⁾ 이 가운데 조선국군준비대, 조선군사학교, 학병동맹, 대한민국준비위원회, 대한임시사무위원회, 광복군국내지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군사단체들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조직되었다.

조선국군학교는 1945년 8월 18일 경기도 광주 지원병훈련소에서 치안 요원과 장차 결성될 국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제1차 생도 모집광고는 확인되지 않지만, 1945년 10월 11일과 12일 제2차 생도모집을 하였다. 11월 20일 제2기생 개교식을 거행하고, 광장리(廣壯理)의 前 일본 병사(兵舍)로 교사를 옮겼다. 조선국군학교는 1946년 1월 ‘중앙육군학교’로 개칭하고, 1945년 12월 2일 중경임시정부 군무(軍務)부장의 자격으로 귀국한 김원봉(金元鳳)을 교장으로 맞이하여 조직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¹⁸⁾

1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231쪽. 해방직후 사설군사단체의 전반적 내용은 이강수, 「국군준비대의 조직과 활동」 참고.

18) 『서울신문』, 1946.1.9.

교 장 : 김원봉(金元鳳) 부 교 장 : 임철재(任喆宰)
 총무부장 : 심재은(沈在殷) 연구부장 : 권태형(權泰衡)
 교육부장 : 박 만(朴 萬) 경리부장 : 전덕원(田德元)

이후 중앙육군학교는 임시정부와 인민공화국에 절대 중립을 표방하고, 1946년 1월 12일 「중앙국군학교의 취지」 등을 발표하였다.¹⁹⁾ 발표문에 의하면 중앙국군학교는 “긴급한 치안요원 양성”과 “장래의 국방군인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학병동맹은 일제말기 강제로 끌려간 학병들이 1945년 9월 1일 보인상업학교에서 치안유지와 ‘국군창건’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²⁰⁾ 학병동맹은 결성 당시부터 인민공화국 지지를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계기로 반소·반공운동이 일어나자, 1945년 12월 29일 좌익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좌파세력과 행동을 같이하였다. 학병동맹은 1946년 1월 18일 ‘학생동맹사건’을 계기로 와해되어 갔다.²¹⁾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1945년 8월 이응준(李應俊) 등 일본육사 출신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그러나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이응준의 경력처럼 그들의 과거 경력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조직한 이후 치안대총사령부 등을 두어 실제 활동을 추진하려 하였지만, 역시 특별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주한민군정이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자 이응준이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1945년 9월 7일 이혁기를 총사령으로 하여 교동초등학교에서 조직되었다. 육군본부 『창군전사』에 의하면 조선국군준비대는 결성당시 경성에 500여 명, 지방에 1천여 명 등 도합 1천 500여 명 가량의 대원이 있었다고 한다.²²⁾ 결성 직후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19) 『서울신문』, 1946.1.12.

20) 『매일신보』, 1945.9.19.

2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330쪽.

22) 『매일신보』, 1945.9.17; 육군본부, 『창군전사』, 288쪽.

대원들을 공개모집하거나 순회반원을 조직, 지방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확대시켰다. 1945년 12월 당시 조직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²³⁾

총 사 령 : 이혁기(李赫基) 부 사 령 : 박승환(朴承煥)
고급부관 : 이영석(李榮錫) 고급참모 : 최영(崔榮), 왕홍경(王弘慶)
군수부장 : 이영섭(李英燮) 교육부장 : 원용덕(元容德)
부관부부관 : 안종열(安種烈) 김계원(金桂元) 등

이 중 이혁기(李赫基)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학병에 끌려갔다 귀환한 후 조선국군준비대를 조직하고 1946년 1월 24일 치안문란죄로 미군정에 3년형을 받았으며 이후 남로당 군사공작 책임자로 활동하였다.²⁴⁾ 부관 부부관인 김계원(金桂元)과 전남지대장인 나학선(羅學善)은 1946년 군사 영어학교에 들어갔고, 조선국군준비대 경북지대장 하재팔(河在八)도 군사 영어학교에 입한 후 미군 맥커리 중위와 함께 국방경비대 제6연대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교육부장으로 있던 원용덕(元容德)은 만주군 출신으로 이후 군사영어학교, 국방경비대, 창군에 깊게 관여한 핵심인물이었다. 조선국군준비대는 좌파적 성향이 강했지만 탈이념적 성향도 확인된다. 이는 해방직후 일반적인 군사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 내면은 일반적으로 정군분리(政軍分離)·불편부당(不偏不黨)적 노선을 취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직후 국내에서 조직된 30여 개의 군사단체는 크게 좌파적 군사단체, 우파적 군사단체, 일본군 출신의 군사단체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광복군국내지대는 임시정부의 조직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시정부는 환국하기 이전에 오광선(吳光鮮)을 임명하여 국내에

23) 『자유신문』, 1945.12.18; 『조선해방일년사』, 1946, 231~232쪽.

24)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06쪽.

광복군국내지대를 설치하였다. 해방직후 광복군 총사령부는 광복군 각 지대에서 일본군 점령지역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10월 중순부터 중국관 내에 있던 청년동포와 일본내 한적사병을 접수하여 잠편부대를 주요도시에 설치하고 있었다. 북경(최용덕), 남경(안춘생), 상해(박시창), 항주(김관오), 한구(권준), 황주(최덕신) 등 7개 주요 도시에 잠편부대를 편성하면서, 국내에 조직한 단체가 광복군국내지대였다.²⁵⁾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오광선은 1945년 8월 하순부터 광복군을 국군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해방전부터 임정을 독립운동단체 중 하나라는 이유로 임시정부를 불승인하였다. 이에 오광선은 1945년 11월 1일 우선 대한민국준비위원회(大韓國軍準備委員會)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절대지지’라는 표어 아래 광복군국내지대 조직을 착수하였다.²⁶⁾

〈대한민국준비위원회의 부서와 총사령부〉

위 원 장 : 유동열(柳東悅) 부위원장 : 전성호(全晟鎬) 비 서 실 : 김의연(金義演)
 총 사 령 : 오광선(吳光鮮) 참모부장 : 김승학(金承學) 부관부장 : 정이형(鄭伊衡)
 현무부장 : 장두관(張斗官) 군수부장 : 최관용(崔寬用) 군기부장 : 김기동(金基東)
 군의부장 : 조이섭(趙利涉) 교통부장 : 김해강(金海崗) 경비부장 : 이기환(李基煥)

그리고 동년 11월 6일 광복군총사령관 이청천의 명령을 받고 대한민국준비대위원회는 광복군국내지대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²⁷⁾ 광복군국내지대는 오광선을 사령, 이승만·김승학(金承學)을 고문으로 하고, 참모부(全晟鎬) 및 고급참모(金相謙 외 3인), 부관부(鄭伊衡 외 3인), 교통부, 군의부, 현무부, 선전부 등을 두었다.

25) 조동걸, 앞의 논문, 198쪽.

26) 『매일신보』, 1945.11.1.

27) 『대공일보』, 1945.11.13.

광복군국내지대는 조선군사후원회, 한국광복군후원회, 한국광복군군사후원회 등 여러 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광복군 지원병을 모집하였다. 이들 후원회는 12월 9일 대한민국군사후원회로 통합되었다.²⁸⁾

3) ‘재경12개단체대표자대회’와 군사단체 통합운동

해방직후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이 창군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군사단체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우선 1945년 11월 7일 국내 12개 군사단체를 통합한 전국군사준비위원회 결성으로 나왔다. 전국군사준비위원회는 결성직후부터 기존의 군사단체를 통합한 ‘국군’ 창설에 주력하였다. 통합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중국 국민당 제1사단장으로 활동했던 박영선(朴永善)이 재경 군사단체 통합을 주장하면서였다.²⁹⁾ 이에 재경 12개 군사단체들이 시립도서관에 모여 ‘재경12개단체대표자대회(在京12個團體代表者大會)’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를 주도한 박영선은 중경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받았고, 광복군은 이미 정통 군대이므로 임시정부가 입국하면 광복군이 신정부의 정통 국방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는 국내 통합군사단체의 명칭에 ‘대한’이라는 명칭을 포함시켜 ‘대한국군준비위원회’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좌익계열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군사단체는 광복군만이 아니라 연안의 의용군과 기타 군대들도 있다고 하여 전국군사준비위원회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본 대회는 결렬되어 대한국군준비위원회(광복군국내지대 중심)와 전국군사준비위원회(조선국군준비대 중심)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삼상회의 후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군사단체 통합운동은 급속히 추진되었다.³⁰⁾ 두 단체는 인민공화국과

28) 『서울신문』, 1945.12.13; 1945.12.7.

29) 국사보훈처, 『독립운동자공훈록』 제4권, 657쪽.

30) 이강수, 「모스크바삼상회의에 대한 좌파3당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한울, 1995.

중경임시정부의 해체를 전제로 민족세력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통합이 본격화 된 것이다.³¹⁾ 1945년 12월 31일 광복군국내지대 부사령 정이형과 국군준비대 이영석은 5백여 명의 대원들과 함께 계동초등학교에 모여 통합 교섭을 하였다. 이들은 “현 단계 조선정세는 민족의 무조건 단결을 바라고 있다. 우리 군인이 우선 단결하자. 그리고 각당과 인공, 임정도 우리를 본받게 하자”고 하였다. 전체 토론에서 “우리 군인은 일정당(一政黨)에 일정부(一政府)에 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삼천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하고, 각당은 해체하여 일치단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20개 정당의 간판에 불질렀다.³²⁾ 그리고 광복군 부사령관 정이형은 신탁통치 철폐를 위해 민족지도자들이 한데 뭉쳐야 하는데, 우선 광복군과 국군준비대가 합작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통합소식이 알려지자 광복군국내지대, 학병동맹, 조선국군준비대, 국군학교 대원 수천 명이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임정, 인공의 무조건 합작을 제안하였다. 이에 임정의 성주식(成周寔)은 “군(軍)은 군(軍)으로 정(政)은 정(政)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언명했다.³³⁾ 실제 1945년 말 인공과 임정은 신탁통치 철폐문제를 목적으로 양 정부의 통합회의를 추진하였고, 1946년 1월 1일 인공이 임정에 동시해체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직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군사단체는 1945년 11월부터 통합운동이 추진되었고, 12월 말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본격화하였다. 좌익적 성향의 군사단체든 우익적 성향의 군사단체이든 이들은 모두 국가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일정당(一政黨)’ 혹은 ‘일정부(一政府)’, 즉 특정정치단체의 군대가 아닌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31) 『동아일보』, 1946.12.30.

32) 『조선인민보』, 1946.1.1.

33) 『중앙신문』, 1946.1.1.

3.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과 국방경비대 창설

1)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

국내 군사단체는 통합운동을 하는 등 신국가의 국군 건설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미군정은 남한에 진주할 때부터 국내외 군사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의 군사단체 불승인 → 재편정책은 남한에 진주한 직후부터 일관되었다. 미국은 1945년 9월 1일 미군정에 보낸 최초의 지시문에서 한국내의 일본군뿐만 아니라,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을 해왔던 “의용군 및 준군사단체의 즉각적인 무장해제”를 미군정에 지시하였다.³⁴⁾ 그리고 1945년 10월 15일 남원사건³⁵⁾을 계기로 미군정의 기존 군사단체 해체 및 국방경비대의 설치는 구체화되었다. 이 국방경비대는 공적인 물리력의 의미를 갖는 “국방군”으로 위치지웠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발표하고 국방사령부를 설치를 발표하였다.³⁶⁾

한국의 영원한 독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내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방호하는데 필요한 시민경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종교·언론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지상과 해상에서 요구되는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모병, 조직, 훈련, 장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한다.

34) 『해방3년과 미국』, 돌베개, 1984, 88쪽.

35) 남원사건은 군정경찰과 미 전술부대가 남원의 인민위원회 및 조선국군준비대 간 충돌한 사건으로, 미군정 당국은 남원사건을 미군정에 대한 국내세력의 저항으로 이해하였다.

36)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 1967.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계획은 『미 외교문서』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1945년 11월 26일 「육군대장 맥아더가 참모총장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 의하면,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계획은 “미군점령 이래로 현존 정부 구조내부에서……미군 감시하에 진행”되고 있었다.³⁷⁾ 병력은 1946년 1월 1일까지 25,000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계획하였다. 한국군 창설의 필요성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은 “애국심에 불타는 비무장의 직업적 사설 군사단체들이 한국에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틀림없이 비밀스럽게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무장하려 들 것이다. 미군 철수에 즈음하여 이러한 병력은 한국의 통합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를 통제할 최선의 방책은 한국인의 지도력을 빼앗아 버리고 그 역량을 미군의 통제 아래 국가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맥아더사령부는 미국무성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기간 중 국방군 창설이 고려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조속한 지침을 당사령부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무성은 “한국국방군” 설치의 국제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1946년 1월 9일자로 위상축소를 전제로 국방경비대 창설과 무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미군정에 넘기면서 최종 승인을 하였다.³⁸⁾ 즉, 미국무성과 미군정이 국방군 건설에 대해 구체적 입장차이는 있지만, 자생적 한인군사단체의 해체와 미국 주도의 국방군건설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은 1946년 1월 9일 삼성조정위원회의 최종 승인에 따라,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 제1연대 창설을 필두로 조선국방경비대 조직이 본격화되었다.

37) 「육군대장 맥아더→참모총장(아이젠하워)에게」, 1945.11.26; 『해방 3년과 미국』, 돌베개, 1984, 158쪽.

38) 「합동참모부→육군대장 맥아더에게」, 1946.1.9; 위의 책, 183쪽.

2) 조선국방경비대 창설

미군정의 해방직후 자생적 군사단체의 불승인 → 재편정책은 미군정이 남한에 진주한 직후부터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남한내 군사단체를 주목하면서 군사단체 해체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5년 12월 29일 건국청년회 회원들이 인민보사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국내 모든 군사단체를 사설 군사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하였다. G-2 보고서에 의하면, 인민보사사건은 1945년 12월 29일 건국청년회 회원 25명이 인민보사를 습격, 인쇄공장을 파괴하고 30여 명의 인민보사 직원을 납치하였다. 이에 국군준비대는 특무대장 吳永柱 등이 출동, 건국청년회와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군정경찰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싸움과정에서 건국청년회원들은 26명의 인민보사 직원을 그들의 본거지인 太古寺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후 12월 31일 국군준비대 대원들은 건국청년회 사령부를 습격, 건청간부를 체포하고, 지하실에 납치되어 있던 26명의 인민보사 직원을 구출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1946년 1월 2일 국군준비대에 감금되어 있던 이홍진(LEE, Hon Chin; G-2에 의하면 이승만의 보디가드로 알려짐) 외 17명의 건국청년회 회원들을 풀어주었다.

여기서 건국청년회는 1945년 9월에 결성되어 1946년 12월까지 활동한 극우단체로, 미군정은 이승만과 김구에 의해 이끌려진 단체로 보고 있었으나³⁹⁾, 국군준비대가 1945년 12월 입수한 「청년회(건청; 필자) 자금일람표」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을 한민당이 제공하고 있었다. 「청년회 자금일람표」는 단 1부만 입수된 것이기는 하나 「일람표」에 의하면, 총 19만 원의 지원금 중 한민당이 3만 6천 원을, 나머지는 공장주가 지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⁰⁾ 여기에 국군준비대가 건국청년회를 습격해서 감금했다는 인물 중에 이승만의 보디가드로 알려진 이홍진이 건청에

39) 신복룡, 『韓國分斷資料集』 6권, 407쪽.

40) 『朝鮮人民報』, 1946년 1월 7일.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건청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조직이라고 우선은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건국청년회의 인민보사습격사건과 관련 미군정의 처리과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2일 국군준비대사령부를 습격, 이흥진 등을 풀어준 이후 미군정의 국군준비대 수색·조사는 급속히 추진되었다. 1946년 1월 3일 미군정경찰은 국군준비대 사령부를 급습, 일제 소총 1자루, 권총 2자루, 일제 총검과 칼집 2자루를 압수하고, 국군준비대원 4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1946년 1월 4일, 1945년 12월 31일 국군준비대 대원들이 건국청년회 사무실 습격한 책임을 물어, 국군준비대 사령관인 李赫基를 체포하였다. 1월 5일과 6일 미군정경찰은 국군준비대를 재차 급습, 급기야 해산을 명령하기에 이른다. 1월 6일 밤에는 국군준비대 사령부만이 아니라 국군준비대 주요간부들의 합숙소인 제일호텔을 수색, 현군부 부대장 安英南 등을 검거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국군준비대 조사과정은 “특별한 통보”도 없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구타와 총포난사까지 있어, 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등 강경분위기로 진행되었다. 1월 7일, 군정청은 국군준비대가 10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1월 8일, 「트루워크」 경기도지사는 신문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치안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국군준비대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미군정의 자생적 군사단체에 대한 정책은, 삼성조정위원회의 1945년 9월 1일자 지시처럼, 처음부터 국군준비대 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1946년 1월 8일 경기도지사 「루트워크」는 국군준비대만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일반에 알렸다. 1946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는 군사단체 해산은 국군준비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복군국내지대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담화까지 발표하였다.⁴¹⁾ 국군준비대 사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국방경비대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46년 1월 21일 군정청경무국에서는 “38도 이남 조선에 있어서는

41) 『朝鮮日報』 1946년 1월 12일(『자료』 1권, 827쪽).

조선국방경비대만이 유일무이한 군사단체이지 그밖에는 어떠한 군사단체도 인정치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이제 국군준비대만이 아니라 광복군국내지대도 유명무실해졌다. 그리고 1월 28일 국내 모든 군사단체를 ‘사설’ 군사단체로 규정하고 국방경비대를 제외한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을 명령하였다.⁴²⁾

이러한 가운데 조선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 제1연대 창설을 필두로 조직이 본격화되었다. 1월 15일 미군정장관은 “현재 당국에서 조선국방경비대를 조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대라는 명칭아래 무력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이 조직뿐이다.”⁴³⁾고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1946년 말까지 각도별로 9개 연대가 조직되었다.⁴⁴⁾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당시 조직 및 부대장 현황〉

| 부대명 | 설치시기 | 설치장소 | 창설부대장 | 과거경력 |
|------|-------------|------|-------|---------|
| 제1연대 | 1946.1.15. | 태릉 | 채병덕 | 일본군 소좌 |
| 제2연대 | 1946.2.28. | 대전 | 이형근 | 일본군 대위 |
| 제3연대 | 1946.2.26. | 이리 | 김백일 | 만주군 대위 |
| 제4연대 | 1946.2.15. | 광주 | 김홍준 | 만주군 대위 |
| 제5연대 | 1946.1.18. | 부산 | 박병권 | 일본군 소위 |
| 제6연대 | 1946.2.18. | 대구 | 김영환 | 일본군 소위 |
| 제7연대 | 1946.2. 7. | 청주 | 민기식 | 일본군 소위 |
| 제8연대 | 1946.4. 1. | 춘선 | 김종갑 | 일본군 소위 |
| 제9연대 | 1946.11.16. | 제주 | 장창국 | 일본육사후보생 |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의 간부요원과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개교하였다. 1946년 4월 30일 폐교할 때까지 총 200명이 입교하여 총 110명의 장교가 배출되었다. 미군정의 원래 계획은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자 중에서 각각 20명씩 선발하여 60명을 군사영어학교에 입교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좌익계 군사단체인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은 참여를 거부했으며,

42) 『중앙신문』, 1946.1.29.

43) 『조선일보』, 1946.1.16.

44)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8, 64쪽. 등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여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입교자들은 만주군 출신 원용덕과 일본군 출신 이응준이 추천한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미군정의 건군작업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소련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미군정은 1946년 6월 15일 국방사령부를 국내경비부(통의부)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명칭을 각각 개칭하였다. 그리고 군사영어학교도 해체되었다. 군사영어학교를 계승한 국방경비사관학교가 1946년 5월 1일 태릉에 설치되었다.⁴⁵⁾

4. 미군정 군사단체 참여세력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

1) 국방경비대 참여세력

해방직후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필두로 국내 자생적 군사단체들은 신정부의 국군을 건설하려 했으나, 미군정에 의해 사설 군사단체로 규정되어 해체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군정의 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 입학을 거부하였다. 대다수의 광복군 출신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광복군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국방경비대 창설에 참여한 인물이 상당수였다. 임시정부 참모총장 출신인 유동열(柳東說)은 미군정 군사조직 최고기구인 통위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후 이범석이 초대 국무총리겸 국방부장관에 취임하면서 광복군출신이 대거 입대하였다.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임명된 것은 일본군 출신 이응준(李應俊)의 추천에 의해서였다. 당시 통역을 맡은 강영훈은 “현재 조선경비대 장교는

45) 한시준, 앞의 논문, 20쪽.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출신 등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군 특히 간부의 화목과 단결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군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어서 추천했다고 한다. 이응준이 어떤 이유에서 유동열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미군정이 어떤 이유로 유동열을 임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경비대 간부출신 절대 다수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군정으로서 조선경비대 설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된다.

유동열은 통위부장직을 승낙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946년 9월 2일 미군정의 최고 직위인 통위부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광복군 편련처장을 역임한 송호성(宋虎聲)이 조선경비대 제3연대장, 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특히 송호성은 1946년 10월 국방경비대 소령으로 임관한 이후 1948년 정부 수립시까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내 당시 국방경비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광복군 출신 채원개(蔡元凱)는 1947년 3월 특임 3기로 임관한 이후 1949년까지 국방경비대 여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렇게 유동열, 송호성 등이 국방경비대에서 지위를 차지하자 광복군 출신들 중 일부가 국방경비대에 입대하기 시작했다. 1946년 9월 23일 선발한 제2기에 송호성만이 아니라, 총사령부 전령장교 출신 고시복(高時福), 1947년 1월 13일 선발한 제3기에 황포군관학교 출신 최덕신(崔德新)·박시창(朴始昌), 제5지대 출신 박기성(朴基成)이 입교하였다.⁴⁶⁾ 그럼에도 광복군 주력은 미군정이 주도하는 건군이나 그 군사기관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특히 이범석 장군이 대한민국 초대 국방부장관을 맡게 되면서, 광복군 상당수가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미군정하에서 참여하지 않다가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에 참여한 것이다. 1948년 선발한 제7기 특별반에는 김관오(金冠五), 김국주(金國柱),

46) 한시준, 앞의 논문, 21~22쪽.

장흥이(張興伊) 등이, 그리고 이준식(李俊植), 오광선(吳光善), 안춘생(安椿生), 박영준(朴英俊), 권준(權峻), 장호강(張虎岡), 김영일(金永逸), 전성호(全盛鎬) 등이 제8기 특별반으로 입교하였다. 이외에도 임시정부 참모장을 역임한 김홍일(金弘一) 장군과 제1지대장을 지낸 채원개(蔡元凱)가 특임으로 임관하였고, 최용덕(崔用德), 김신(金信)은 공군에, 중국군 출신 김응조(金應祚), 이종국(李鍾國), 오동기(吳東起), 조개옥(趙介玉) 등이 각각 국군에 참여하였다.⁴⁷⁾

광복군국내지대 핵심인물들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조직에 참여한다. 광복군국내지대 전신인 대한민국군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열(柳東說)이 미군정 군위부장으로 참여하였고, 광복군국내지대 최고사령관 오광선(吳光鮮)과 참모부 참모장 전성호(全盛鎬)가 각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참여하였다.

광복군 출신만이 아니라 조선국군준비대 출신도 미군정의 군사기구에 참여한 인물이 상당수이다. 조선국군준비대 부관부부관인 김계원(金桂元)과 전남지대장인 나학선(羅學善) 등이 있다. 이들은 1946년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갔다. 특히 조선국군준비대 경북지대장 하재팔(河在八)도 군사영어학교에 입한 후 미군 맥커리 중위와 함께 국방경비대 제6연대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⁴⁸⁾ 그리고 국방경비대 경남지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오덕준은 그 부하들과 함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다.⁴⁹⁾ 해방 직후 충북 청원에서 '장병대'를 조직하고 장병대 대장 겸 국군준비대 충북지부장을 지낸 민기식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국방경비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장병대 대원들도 그와 함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다.⁵⁰⁾ 국군준비대 헌병부장 연정(延貞)과 그의 동생 연상(延祥)도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고, 국군준비대 서울지대 중대장 임부택, 충북지부장

47) 한용운, 앞의 책, 64~66쪽; 한시준, 앞의 논문, 22쪽. 재인용.

48) 이강수, 앞의 논문, 226쪽.

49) 안진, 앞의 책, 222쪽.

50) 노영기, 앞의 논문, 78쪽.

민기식 등도 군사영어학교에 참여하였다.

좌파세력으로 알려진 학병동맹 출신 중에는 미군정기 군사기구에 참여한 인물이 거의 없지만, 1945년 11월 24일 귀환학병 보고대회에 참여했다가 이후 학병단으로 간 조암, 김근배, 김형일 등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국방경비대 각 연대 창설에 참여하였다. 1945년 12월 학병동맹에서 탈퇴한 ‘학병단’ 출신들도 국방경비대에 참여하였다. 안동준, 백남권, 임선하 등은 미군정 국방사령부를 직접 찾아가 군대 창설에 관해 교섭한 뒤 주한미군정의 제안에 따라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국방경비대에 장교로 대거 참여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조직된 국방경비대 제10연대부터 제15연대 주요 부대장의 성향도 학병출신으로 바뀌었다.

〈1948년 국방경비대 창설당시 조직 및 부대장 현황〉

| 부대명 | 설치시기 | 설치장소 | 창설부대장 | 과거경력 |
|-------|-------------|------|-------|----------|
| 제10연대 | 1948. 5. 1. | 강릉 | 백남권 | 학병 |
| 제11연대 | 1948. 5. 4. | 수원 | 박진경 | 학병 |
| 제12연대 | 1948. 5. 1. | 군산 | 백인기 | 학병 |
| 제13연대 | 1948. 5. 4. | 온양 | 이치업 | 학병 |
| 제14연대 | 1948. 5. 4 | 여수 | 이영순 | 일본군 경리장교 |
| 제15연대 | 1948. 5. 4 | 마산 | 조 암 | 학병 |

1946년 당시 국방경비대 부대장이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948년 국방경비대 부대장의 성향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제시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광복군이나, 해방직후 국내 군사단체의 주력 세력이었던 조선국군준비대와 광복군국내지대 주요 인물들이 미군정의 군사단체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창군에 참여하였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군부 내 숙군과정을 통해 배제되었지만, 국방경비대에는 조직당시만 해도 광복군계열과 해방직후 국내 군사단체세력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

해방직후 임시정부계열 등 민족세력이 미군정과 갈등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지만 광복군계열과 국내 군사단체 주요 인물들이 어떤 이유로 미군정의 군사단체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군활동에 참여했을까. 이와 관련해 해방당시의 정국과 그들의 사상과 철학, 노선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정부수립 전후 남한정국을 보면,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주력 세력이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계열 일부가 개인 자격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선거전부터 “선거에 참여해서 투쟁하자” “대의기관을 통해 당의 당강을 실현하자” 등을 주장하였다.⁵¹⁾ 실제 이들은 제헌국회에 참여해서 반민특위를 조직하고,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으며, 심지어 미군철수안까지 결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국회의원들은 남조선노동당 프락치로 몰리고, 때로는 반민특위위원살대상자로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⁵²⁾ 이를 구성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48년 남한정국은 백범 김구의 남북협상운동과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운동으로 분화되었지만, 남북협상을 이끌고 있던 한국독립당과 민족자주연맹,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내부에서 ‘5·10선거에 참여해서 개혁하자’는 참여적 개혁세력이 대두하였다. 이들은 5·10선거 참여파와 5·10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남한정부수립에 참여한 세력으로, 전자는 남북협상을 이끌고 있던 중간파연합의 민족자주연맹과 한국독립당 계열 출신으로 제헌국회 내 소장파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후자는 남북협상과 제헌국회에 모두 불참한 신한국민당의 안재홍계열과 민중동맹의 김병로계열, 남북협상후 정계에 진출한 조소앙의 사회당계열, 그리고 남북협상 후 동요하던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 계열 등이었다. 즉 해방정국의 정치노선은 이분법적 단순구도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51) 『주한민군보고서』, 1948.3.27; 조소앙, 「한독당결별선언서」, 1948.10.11.

52) 이강수, 앞의 책, 89~102쪽.

광복군계열 다수가 미군정의 건국활동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가 조선국방경비대에 참여하고, 일부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주력세력이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계열 중 일부는 개인자격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한 것과 같다.

이들이 왜 미군정의 군사단체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군활동에 참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45년 12월 말 신탁통치 문제로 남한 정국이 어지러울 때,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의 통합과정의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광복군국내지대는 “인민공화국, 임시정부 해체”를 전제로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 등 국내 군사단체 통합운동이 전개되었고⁵³⁾, 통합운동의 핵심 논리는 “군인(軍人)은 일정당(一政黨)도 일정부(一政府)도 일방만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좌우익 대부분 군사단체의 상위 노선이었다.

해방직후 상당수의 군사단체는 정치적 경향성을 띤 경우도 있었지만,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이념도, 정당도, 정부도 아닌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를 지향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정부, 인민공화국,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도 중요했었지만 국민, 국가, 민족이 더욱 중요했다. 그렇기에 광복군에 참여했다가 국방경비대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군으로도 참여하였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행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다. 실제, 국방경비대 모병 모집관련 1947년 4월 22일자 『제주신보』의 보도를 보면,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려는 피끓는 젊은이들의 애국군사기관이다. 우리들은 모국의

53) 광복군국내지대, 「반탁성명서」, 『동아일보』, 1945.12.30.

주구도 아니다. 정당의 이용기관도 아니다. 다만, 안으로는 자주독립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국방의 중책을 완수하려는 국가의 간성이다.⁵⁴⁾

국방경비대도 사상보다는 자주독립국가 건설, 국군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이념보다는 자주독립국가의 군대가 우선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국방경비대와 연계시켜 살펴볼 필요는 있다. 국방경비대의 인적 물적 기반 그 자체를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연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국방경비대의 초기 조직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만이 아니라, 광복군과 국내 군사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조직이었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연원을 일제시기 광복군과 해방 후 국내 창군운동 단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보면 미군정에게서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그 역사적 뿌리로 삼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역사적 연원 또한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국방경비대와 연계되었다고 하지만, 그 민족사적 뿌리를 국방경비대로만 단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에 행정권을 이양받았지만, 그 역사적 연원을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군도 국방경비대에서 연계되었지만, 그 역사적 연원·정신적 뿌리를 광복군의 무장투쟁의 역사, 해방직후 자생적인 국군건설운동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최소한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합당하다.

물론 물리적 연원과 민족사적 연원이 모두 같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정신적 측면에서 역사성을 찾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54) 『제주신보』, 1947.4.22.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국방경비대가 아니라, 한말 의병이나 만주의 독립군, 일제하 항일무장투쟁, 해방후 국군건립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의 정신, 불편부당적 국민의 군대, 민족적 군대로 나아가려는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5. 맺음말

해방직후 국내의 민족세력은 항일무장투쟁과 신국가의 창군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945년 12월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국내 군사단체통합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처음부터 한국민의 군사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남한 유일의 정부라고 선언한 것처럼, 미군정이 만든 국방경비대만이 유일한 군사단체로 보고 국내외 모든 군사단체를 해체시켰다. 그 과정에서 광복군과 국내 자생적 군사단체 등을 모두 불법적인 ‘사설’ 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이 국방경비대를 계승하였다.

국방경비대 구성원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주류였지만, 실제 광복군 출신과 해방직후 자생적으로 창군운동을 하던 조선국군준비대, 광복군국내지대 등 다양한 국내 군사단체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그들이 왜 참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남한 군사단체의 ‘불편부당(不偏不黨)’적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실제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의 통합과정을 보면, “군인(軍人)은 일정당(一政黨)도 일정부(一政府)의 군대가 아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길 희망하였다. 즉, 특정 정치단체의 군대가 아닌 민족의 군대,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광복군과 국군준비대만이 아니라, 국방경비대와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하였다. 이점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을 찾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국군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국방경비대에 두고 있다. 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인적, 물적 측면에서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경비대 초기 조직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만이 아니라, 미약하나마 광복군과 국내 군사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조직이었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연원을 일제시기 광복군과 해방 후 국내 창군운동 단체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실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에 행정권을 이양받았지만, 그리고 임시정부계열보다 오히려 친일 경력자가 더 포함되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도 물리적으로는 국방경비대에서 연계되었지만, 그 정신적 뿌리·역사적 연원을 해방직후 창군운동, 더 나아가 일제하 항일무장단체와 만주의 독립군, 한말 의병운동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최소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서 찾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군 창설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한말 의병의 정신,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정신, 해방 후 건국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때만이, ‘일정부(一 政府), 일정당(一 政黨)의 군대’가 아닌, ‘불편부당(不偏不黨)’적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 우리민족의 국군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대한민국 국군, 국군준비대,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헌헌법, 국방경비대

<ABSTRACT>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Their Historical Implications

Lee, Gang-soo

After the Liberation, the nationalists in the country and abroad developed the anti-Japanese guerrilla struggles and the new nation's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forces. Moreover, they tried to unify diverse domestic military units following the turmoil of trusteeship issue in August 1945. However,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did not recognize Korean military units from the beginning. As USAMGIK declared that USAMGIK was the only government in South Korea, USAMGIK acknowledged that the Constabulary force created by USAMGIK was the only military units, and dissolved all the Korean military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and abroad. In the process, USAMGIK label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all the spontaneous domestic military groups as the illegal private military organizations. There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succeeded the Constabulary forces created by USAMGIK.

Although the members of the Constabulary force mainly had the background of Japanese army and Manjugun, a good percentage of people who had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the domestic military units were included in it such as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Hagbyeong Dongmaeng, and the domestic detached force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at spontaneously developed the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army after the Liberation. The reason they participated in the Constabulary force is not clear, but it is not unrelated to the impartial awareness in the then military units of

South Korea. They participated in the Constabulary forc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s well as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in order to build up the nation's force, national force, not a specific political group's force. This is the great importance to those who attempt to find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re rooted in the Constabulary forces because the Constabulary forces is connect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in terms of its members and organizational background. As the early organization of the Constabulary forces includ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all the spontaneous domestic military organizations as well as those who had the background of Japanese army and Manjugun, no wonder we attempt to fin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during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domestic groups that developed the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army after the Liberation.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ountry was actually transferred from USAMGIK to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8, but a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fines that the Constitution succeeds the legitimacy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proper that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finds its spiritual and historical origin in the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army after the Liberation and, by extension, in anti-Japanese military group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 Manchuria during Japanese colonialism,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re physically associated with the Constabulary forces. At the very least, finding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origin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nterpretation faithful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ly if we do that, we can hypothetically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Only then ca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stand as South Koreans' army and national armed forces for our nation.

Key Words :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the Constabulary force